외교부

국제경제동향
(Global Economic Brief)

Vol 2021-13호
다자경제기구과
2021. 10. 14.

※ 표제 <국제경제동향>은 한국은행, OECD, IMF, 국제금융센터 등의 홈페이지 게시 자료 및 언론기사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정리한 것으로 외교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세계 경제 : 녹색기후기금(GCF) 12억불 규모 신사업 승인, 중국 전력난

❑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12억불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 승인(기획재정부)

*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설립에 합의, 2013년 한국 송도에서 사무국 출범

o 10.4일~8일 개최된 제30차 이사회에서 44개 개도국 대상 총 13건, GCF 지원액 12억불의 사업을 신규 승인*

* 아마존 바이오경제 펀드 지원(GCF 지원액 2.8억불), 사헬 5개국 사막 활용 전력생산 프로그램(1.5억불), 탄자니아 농업기후적응기술 확산 지원(1억불) 등

- 금번 승인을 통해 향후 미주개발은행(I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의 협조융자를 포함하여 총 40억불이 투자되는 레버리지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

o 이에 따라 GCF 누적 추진사업은 총 190건, 지원액 100억불, 총사업비 372억불 규모로 확대되어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약 6억 명이 혜택을 받고 총 20억 톤 규모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

❑ 중국, 최악의 전력난에 직면(국제금융센터)

o 글로벌 수요 회복과 석탄가격 상승, 석탄기업 규제 정책 등에 더하여 최근 호주산 석탄 수입 감소, 중국 최대 석탄 산지인 산시성 폭우 등이 가세하며 전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

- 중국 31개 지역 중 20여 개 지역에서 공급 제한 조치가 적용되었고, 현지 진출 국내 기업인 포스코의 장쑤성 제강 및 열연공장 가동도 일부 중단됨

o 중기적으로는 자체 석탄 생산량 증대, 대체에너지 생산 확대 등으로 전력수급이 개선될 것이나, 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동절기를 앞두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공급난 해결이 어려울 전망

-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는 한편, 중국의 전력난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차질 또한 지속될 우려*

* 중국의 수출품에는 타국가로부터 공급받은 중간 투입물이 포함되고 타국가의 수출품에도 중국산 부품이 활용됨에 따라 중국의 공장 가동 중단은 글로벌 공급망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침

2 한국 경제 : 9월 수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수준 기록 등

❑ 9월 수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수준 기록(산업통상자원부)

o 9월 수출이 11개월 연속 큰폭으로 증가하며 무역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총수출액(558.3억불)과 일평균 수출액(26.6억불) 모두 역대 1위를 경신

- 반도체*·석유화학·철강 등 중간재와 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컴퓨터 등 IT 품목이 모두 크게 증가하며 상승세를 견인

*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920억 달러로, 금년내 1,000억 달러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9월 고용 호조 지속(기획재정부)

o 9월중 취업자수가 민간·공공부문에서 모두 큰폭으로 개선되며 전년 동월대비 7개월 연속 증가(+67.1만명)

- 숙박음식·교육업 등 일부 대면업종 고용도 개선되었으며, 전 연령대의 고용률이 2개월 연속 상승하고 실업자와 실업률이 모두 하락하는 등 각종 고용지표 개선세 지속

<경제용어> 근원인플레이션율

근원인플레이션율(core inflation rate)은 물가변동을 초래하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 일시적인 공급충격의 영향을 제외한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을 말한다. 대부분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서 농산물 가격, 국제원자재가격 등의 변동 부분을 제거하여 계산한다. 우리나라는 근원인플레이션 지표로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를 작성해 왔으며, 2010년 기준 지수부터 OECD 방식에 의한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를 추가로 작성하고 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물가에 미치는 단기적 충격이나 불규칙 요인이 제외되어 기조적인 물가상승의 흐름을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 일반 국민이 실제 느끼는 체감물가와 괴리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